관계부처합동 | 보도설명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. 11. 11.(수)

돌봄·폭력피해자 지원 사업은 '26년 대비 확대되었으며, 보조율 조정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.

< 보도 내용 >

□ 2026.11.11.(수) 세계일보는 「돌봄·범죄피해자 국비지원 20%↓… 지자체 한숨 깊어진다」 기사에서,

○ "성평등가족부가 편성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주요 사업의 국고보조율이 감소*한 것으로 확인됐다"며, "기존에 보조율이 50%였던 곳은 내년도에 30%로, 70%였던 곳은 50%로 일괄조정됐다"고 보도하였습니다.

* 아이돌봄 지원(서울 30, 지방 70→50%),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(서울 50, 지방 70→50%),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, 가정폭력·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,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(서울 50→30, 지방 70→50% 등) 5개 사업의 일부 내역사업 보조율 조정

< 관계 부처 입장 >

□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**재정지출 효율화** 및 **유사사업 간 국고보조율 일관성 확보**를 위해 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율을 조정하였습니다.

□ 국고보조율이 조정되었지만, **서비스 제공 물량** 및 **종사자 인건비** 등은 확대되어, 국비·지방비를 합산한 **전체 사업예산**은 **'26년 대비 증가**하였습니다.

○ 특히, 아이돌봄서비스는 내년 예산안에 **이용자 지원확대** 및 **아이돌봄사 처우개선**, **서비스제공기관 인력 보강** 등 **서비스 품질** 및 **공급기반 강화**를 위한 예산*이 반영되었으며,

* 아동 연령기준에 따른 지원 격차 폐지, 아이돌봄사 돌봄 수당 인상(5%), 돌봄사 200명 이상 관리 서비스제공기관에 센터장 인건비 지원 등

○ 젠더폭력피해자 지원 사업의 경우, **무료법률구조 지원 강화**, 폭력피해자 **주거지원 확대**, **종사자 처우개선** 등 **피해자 보호·지원 기반 구축** 및 **인프라 강화**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.

□ 기사에서 언급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사업(자활지원센터)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하되, 향후 **지방정부 수요**와 **재정여건**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**관계부처 간 지속 협의**해 나가겠습니다.

○ 성착취 피해 아동·청소년 지원센터는 최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력 확충 예산을 **사업 시행 이후 최초로 반영**했으며, 성착취 피해 아동·청소년을 **빈틈없이 지원**하도록 **적정 인력을 지속 점검**하겠습니다.

□ 정부는 국고보조율 조정에 따른 **사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**하고, 돌봄 및 폭력피해자 지원에 **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**해 나가겠습니다.

담당 부서	성평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 황우정 (02-2100-6061)
		담당자	서기관 배재웅 (02-2100-6068)
	기획예산처 국민복지예산과	책임자	과 장 진민규 (044-214-2910)
		담당자	사무관 전수민 (044-214-291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